

‘의사 대신 수술’ 간호사 논란재점화

간호사들, 불법 의료행위 실태 고발

“의사 대신 수술 근절해야” “대안있나”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에 손을 놓은 사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PA(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동물 가면을 쓰고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 2012년 대한전공의협회가 상계백병원 PA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수년째 계속돼온 ‘PA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지 않도록 PA를 근절하거나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13일 “일부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PA가 늘어났고, 병원에서 간호사를 보내 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PA는

불법인 만큼 합법화가 아닌 아예 근절하거나, 의사를 더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 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환자의 복부를 절개하는 등 의사 대신 업무를 하는 PA 간호사는 전국에 만여 명이 이른다.

반면 대형병원 의사들은 PA를 불법으로 몰아가면 병원이 마비되고 수술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의 A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부족하고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뽑기 어려운 상황에서 PA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PA가 불법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B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부족한데 PA도 불법이라면 의사를 충원해야 하는데 비용 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담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의사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해야”...정부 개입 필요

양측이 ‘PA 합법화’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할 계획이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의용소방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와 담양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장현동)는 1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담양군 문화회관)에서 백신 접종 지원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담양군 의용소방대원들은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실시 후 진행하며, 주요 활동 사항은 ▲접종대상자 질서유지 ▲예진표 작성 안내 ▲체온 확인 ▲예약 여부 확인 ▲예방접종 안내문 배부 ▲구급대원 보조 ▲질문 응대 등이다.

배동관 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공공장소(마을회관, 노인정, 터미널) 방역 지원활동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 지킴이로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소방, 화재경보기 설치안내 이색 홍보 나서

여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5일 어린이날 휴일을 맞아 여수를 방문해 주시는 시민분들과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안내를 위한 이색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화재경보기의 의무설치사항에 대해 모르는 시민분들에게 이색적인 방법을 통해 중요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주택용 화재 발생 사고 사례안내 ▲홍보용 전단지 및 마스크 배부 ▲소방관과 사진찍기 등이다.

또한,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시 시민들과 목·찌·빠 게임을 통해 안내하여 좀 더 이색적인 방법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여수=오상호기자

광주 동부소방, 화재취약계층 찾아 소방안전교육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10일 오전 광주여성자활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화재시 대피방법 ▲올바른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홍보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이용자 중 한 명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순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교육을 받아보니 경각심을 갖게 됐다”며 “내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할 응급 처치 법 등을 익힐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최정식 동부소방서장은 “소화기 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 요령을 숙지해 유사 시 내 이웃과 동료의 생명을 구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소방, 안전한 산행! 응급처치 체험교실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10일 옥룡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산악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산악안전 및 응급처치 요령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백운산 종주를 앞두고 있는 학생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악사고별 유형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위험요소 파악,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붕대감기, 부목사용법 등)에 대하여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자신의 체력 한계를 넘어 무리하게 산행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과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응급상황에서 소지품 또는 주변의 물건을 즉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교육에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응급 및

광양=심종섭기자

“돌봄전담사 교섭 진척 없어”...학교비정규직, 파업 재경고

“최저생계비보다 공무직 평균 월급 낮아...임금차별 여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3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가 열고 있는 광주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시·도교육청과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교육 당국에 파업을 재차 경고했다.

이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오는 6월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을 앞두고 교육청들의 성실 교섭과 정규직 교사와의 임금 차

별 해소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3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3개 단체의 연대체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권을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데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파업을 벌였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과 돌봄전담사 채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감협과 관계 부처, 교육공무직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렸다. 노조는 근로시간 연장 등 처우 개선안 마련을 전제로 지난해 12월 2차 파업을 유보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는 오는 6월 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들과 교섭조차 거부한다”며 “교육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기만적이거나 실행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올해도 파업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을 앞두고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을 행하고 임금 차별 해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는 “법원이 판시했듯 노동자의 지위나 직무, 노동내용과 상관없이 같은 직장의 직원이면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할 ‘복리후생성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반토막도 안 된다”며 “근속임금의 심한 격차로 숙련도가 높고, 더 오래 학교에 헌신수록 차별은 더 커져만 간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교원과 정규직 공무원은 호봉제가 적용돼 매년 월 7~13만원의 임금이 오르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지난해 3만5000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근속수당이 많아야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방학 중에 일하지 않는 10만여명의 교육공무직의 경우, 30년차까지 평균 임금 총액이 월 216만원으로 지난해 대법원이 정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월 284만9000원, 4인가족)에 미치지 못한다고 학비연대는 밝혔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